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4년 9월 1차



주요 현안



여성가족부,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51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311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 2023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사업 등 총 27,843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전체 과제 중 7,501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정책개선을 추진한 과제는 7,024건 (93.6%)으로, 이 중 3,789건을 개선 완료하여 정책개선 이행률이 전년보다 4.2%p 향상
- 2023년도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주요 정책개선 사례에서 기획재정부는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 휴직수당에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월 10만원→20만원)를 상향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8.27]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116

여성가족부, 2025년 예산안 발표

☑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안을 2024년 1조 7,234억 원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힘

- 202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8.2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128

여성가족부,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발표

☑ 여성가족부는 제29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남녀의 모습을 부문별로 분석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발표

- 2023년 1인 가구는 782만 9천 가구로 일반 가구의 35.5%를 차지하며 2015년 520만 3천 가구 대비 50.5% 증가했고, 남성 1인 가구는 30대(21.8%), 여성은 60대(18.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1.4%로 2015년 55.7% 대비 5.7% 포인트(p) 상승했고,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71.3%로 2015년 59.6% 대비 11.7%포인트(p) 상승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9.0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142

여성가족부, 2023년 성별 임금 격차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시대상회사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등 조사 결과 발표

- 2023년 공시대상회사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857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7,259만원으로 공시대상회사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 임금 격차는 26.3%로 나타남.
-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30.7%) 대비 4.4%p 감소되었으며, 2023년 공시대상회사의 남녀 평균임금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특히 여성임금 상승폭이 남성임금 상승폭보다 더 커,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9.0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143

여성가족부,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는 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주거 제공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예산 신규 반영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 여성가족부의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이 신설되는 등 2024년 5,441억 원보다 460억 원(8.5%) 증액된 총 5,901억 원 편성
- 여성가족부는 2025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학용품비 지원 대상과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지원할 계획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9.0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10148

교육부, 학교 댄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 구성·운영

☑️ 교육부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댄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 운영

-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댄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하는 한편, ▲학교 댄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할 방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8.28]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065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s=moe&m=020402&opType=N>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돌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1인)	2024-08-28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등 일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 제고(안 제6조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2024-08-28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평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3인)	2024-08-2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지급여 신청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등)

가족·돌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2024-08-29	협동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돌봄 문제 해소에 기여(안 제44조의3 신설 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2024-08-30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경감(안 제15조의17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2024-08-30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만 해당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부·모 가정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통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6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2024-09-03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더욱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가족돌봄휴직 등을 보다 두텁게 지원(안 제2조, 제14조제6항 등)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2024-09-03	육아휴직 급여액을 상향하여 아이를 낳은 부모의 생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난임치료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더욱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 확대(안 제70조제4항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2024-09-04	육아휴직의 기간을 18개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 양립 지원(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및 제19조의4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2024-09-05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자 하며,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저출생 현상 개선(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등)

가족·돌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2024-09-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면서, 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현상 개선(안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및 제77조)
저출산·고령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의원 등 13인)	2024-09-05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은 저출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마련(안 별표 1 제24호 신설)
건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현의원 등 14인)	2024-08-20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안 제11조제1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2024-09-03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말기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시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하며, 연차휴가 산정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 마련(안 제60조제6항 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2인)	2024-09-05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 예방(안 제11조의6제1항 등)
젠더 폭력·안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2024-08-26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자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2024-08-2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영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해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 확산 방지(안 제44조의7제3항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의원 등 10인)	2024-08-27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적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젠더 폭력· 안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2024-08-27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 또는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에는 소지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2024-08-27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반포 목적에 상관 없이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 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안 제14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5인)	2024-08-27	포털, 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강화하고,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 조성(안 제44조의11 신설 및 제44조의7·제7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1인)	2024-08-28	포털, 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을 활용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 및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 강화(안 제44조의7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2024-08-28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중앙디지털 성범죄피해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7조의3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4-08-28	고객 외에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도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직장 근로자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현행법 제37조제1항의 벌칙조항에 벌금형과 징역형 간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편차 조정(안 제14조의2제1항, 제37조제1항)

젠더 폭력· 안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2024-08-28	신속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을 위해 국가적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3조제1항제8호 신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2024-08-28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법적 용어를 ‘영유아’로 표기하고 있는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산후조리원에서의 신생아 사고 방지(안 제15조의4제3호 신설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2024-08-28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안 제14조의4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2024-08-28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2024-08-28	특례의 적용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을 추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 도모(안 제25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2인)	2024-08-28	허위영상물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편집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영상물 또는 허위영상물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며,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도 처벌(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4-08-29	임시조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활용하여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기소하려는 검사로 하여금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사절차 시 피해아동의 보호 강화(안 제25조의2 신설 및 제47조제1항)

젠더 폭력· 안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2024-08-29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38조의2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2024-08-29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과 관련한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보완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44조의4 및 제44조의11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2024-08-29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1인)	2024-08-29	“편집물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하며, 촬영물 또는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 마련(안 제14조의2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14조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08-29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한편, 허위영상물을 구입·저장한 자와 해당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7인)	2024-08-30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촬영물등과 함께 피해자의 성명, 나이, 사진 등 인적사항이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의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구심점이 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함에 따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컨설팅 업무를 구체화하고 삭제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내용을 법률에 명시(안 제7조의4 신설 등)

젠더 폭력· 안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2024-08-30	친족범죄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호체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등에 있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조치(안 제12조제9항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3인)	2024-08-30	목적에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등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한편, 허위영상물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제1항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2024-08-30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면서, 해당 촬영물의 대상으로 등장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상정보가 작성된 게시글의 삭제를 함께 지원(안 제7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2024-08-30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강하게 보호(안 제11조의2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2024-09-02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14조의4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2024-09-02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25조의10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수사기관의 장이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을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에 불응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처벌하도록 보완(안 제22조의5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2024-09-0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불법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안 제44조의7)

젠더 폭력· 안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2024-09-02	성범죄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인하는 등의 행위인 그루밍 또한 성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프라인상의 그루밍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루밍 외에 오프라인상의 그루밍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조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2024-09-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간음 등을 범한 때에는 현행법상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 예방(안 제4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5조,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2024-09-02	온라인 상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 오프라인 상 만남으로 이어져 성착취 유인·대화 또한 발생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범위를 넓혀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 해소(안 제15조의2 및 안 제25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8인)	2024-09-02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한 자를 불법 촬영한 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안 제14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보완(안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2인)	2024-09-02	①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②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③ 성범죄의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포괄적인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보완(안 제309조의2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2024-09-02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딥페이크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 조성(안 제44조의7, 제44조의11신설 등)

젠더 폭력· 안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8인)	2024-09-02	텔레그램 등 SNS 익명 대화방에서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성범죄 콘텐츠 적극수사 및 근절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신분비공개수사 제도가 사후승인제도여서,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하였음에도 신분비공개수사 사전승인을 받고자 대기하다가 해당 방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함에 따라 야간·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적극적 수사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안 제25조의4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2024-09-02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조항에 편집물을 추가하여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형을 가중(안 제14조의2제4항, 제5항, 제14조의3, 제14조의3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9인)	2024-09-03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안 제14조의4 신설 및 제50조제1항제1호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24인)	2024-09-03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안 제25조의3제3항 및 제8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6인)	2024-09-03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등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반포한 자 및 포털, 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 근절(안 제2조제1항제3호,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21인)	2024-09-04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에 허위조작정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6인)	2024-09-04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 도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젠더 폭력· 안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09-04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며, 실제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가 재범을 저지르고 또다시 수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안 제42조의2 신설 및 제72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5인)	2024-09-04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 관서가 수사할 수 있게 보완(안 제41조의2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2인)	2024-09-04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범죄 현장 등을 발견한 경우 즉각적인 피해 영상물을 확산 차단 조치하도록 하여, 불법 영상물의 확산을 막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안 제14조의4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2인)	2024-09-05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영상물에 관한 압수 방법으로 파일 원본을 즉각 삭제하고 해당 전자 파일의 사본을 취득하는 방식(일명 ‘잘라내기식 압수’)을 도입해 피해 영상물 유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으로 인정하는 조항 신설(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2024-09-05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음란물 등을 주거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처벌(안 제13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2024-09-06	동 법률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 보완·개선(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2024-09-06	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톱킹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 강화(안 제18조제2항)

젠더 폭력· 안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2024-09-09	법령상 양형의 필요적 참작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에게 야기된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하여 양형요소를 구체화하고 양형의 예측가능성과 균형성 담보(안 제51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2024-09-09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고, 법원이 잠정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스톱킹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안 제9조제7항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2024-09-09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을 직접 삭제 및 보존할 수 있는 보존명령제도를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피의자가 불명이어도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할 특례 규정을 두고,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증인신문 절차를 개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안 제13조의2 등)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보도자료

AI 기술이 성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젠더 편향 등 윤리적 문제 해결해야(8.28)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에서 나타나는 젠더 편향성을 해소하고 젠더 혁신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과 젠더 혁신”을 주제로 제13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공동 개최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bodoView.do?p=1&idx=132434>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KWDI 연구보고서]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8.26	서울신문	성폭력피해자 지원 병원도 “수술 못해요”...안전한 임신중지는 ‘먼 얘기’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8/26/20240826500229
[제13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과 젠더혁신	8.28	BBS NEWS	인공지능과 젠더혁신...제13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7318
		여성신문	‘인공지능과 젠더혁신 포럼’ 29일 열린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423
	8.29	뉴시스	AI가 보는 CEO는 ‘백인남성’, 사회복지사는 ‘여성’...“젠더편향 심각”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9_0002868430
	8.30	이데일리	AI와 젠더혁신은? 전문가들 모여 성 격차 해소 방안 논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44886638992568
		여성신문	“AI는 이미 젠더 편향됐다... 차별금지 원칙 기반 법제화 필요”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498
	9.2	교수신문	“AI, 젠더 관점의 데이터 형평성 중요”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24144
		한경비즈니스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과 젠더혁신’ 포럼 열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9022301b
[KWDI 연구보고서]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개념화와 대응 방향 모색	9.6	경향신문	신고 7만790건, 구속은 226명...겨우 재판 가도 ‘초범이라 감형’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060600001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8.26	서울신문	성폭력피해자 지원 병원도 “수술 못해요”...안전한 임신중지는 ‘먼 얘기’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8/26/20240826500229
8.28	국민일보	“DM으로 내 뱃페 사진이 왔다” 공포 뒀던 여고생, 일상이 끊겼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463317&code=61121111
8.29	뉴시스	지인 대상 뱃페이크 확산...“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8_0002865360
8.31	뉴스1	“엄마 건강도, 태아 생명도 위태”...낙태죄 폐지 공백 현실적 대안은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524172
9.5	연합뉴스TV	점점 감소하는 초혼...여성 고용률은 13년 새 최고	정성미 연구위원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905020400641?input=1825m

유관기관 연구동향



뱃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국회입법조사처)

현행 신분비공개·위장수사방법의 도입 배경과 허위음란물 관련 처벌규정 및 법정형을 살펴보고, 뱃페이크 성범죄의 수사·처벌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검토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2024.09.10]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438>